

보도자료

2013. 6. 28.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사법등기국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김봉선 (☎02-3480-1679)

사법등기심의관 강성훈 (☎02-3480-1374)

공보관실 ☎ 3480-1451

“2013. 7. 1. 성년후견제도 시행”

-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 이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후견등기제도 시행

■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음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음
-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임.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가 시행되고,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진행 경과

- 2011. 3. 7.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 2013. 4. 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23호) 공포
- 2013. 6. 5.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69호) 공포
- 2013. 6. 7.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95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96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97호)」 제정

■ 성년후견제도 주요내용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차이점

내 용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뉨.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음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청구권자)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관할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관할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관할

■ 재판 비용에 대한 지원(절차 구조)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임

-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후견인의 선임 및 역할

-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됨
-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음
-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후견인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짐
 - **신상보호:** 의료, 간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음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후견인에 대한 감독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

할 수도 있음

-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음

■ 후견등기제도 관련 주요내용

-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안전보호와 사생활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한 자 등으로 한정함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7종이 있음

■ 성년후견제도 시행 준비사항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법관들로 구성된 성년후견TFT가 구성되었고, 201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운영되면서 총 35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 법령 정비 작업, 해설서 발간 작업 등을 지원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좋은 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 후견인 후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유도하였음. 그 결과 각 단체에서는 후견인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현황은 각급 법원에 공지되어 전문가 후견인 선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법원이 후견인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절차를 대법원 규칙인 가사소송규칙에 마련하였음
- 그밖에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정비 시 이를 반영하였고, 대한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신감정 시행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음

■ 기대효과

- 성년후견제도 시행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당사자에게 맞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하게 되었음

